정부, 탈레반과 '직접접촉' 조율…장기전 대비

장소 합의 지연…"유엔 신변보장은 어렵다" 통보

한국인 인질 건강 유지 관건…의약품 전달에 주력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탈레반 간 '직접접촉'이 요구조건과 접촉장소 등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레반측과 직간접 교신채널을 통해 '의견조율'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 한국인 인질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진 파견이나 의약품 전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탈레반과의 교신채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황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면서 "직접접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 작업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직접접촉'의 장소 선정문제는 피랍자들이 억류된 가즈니주(州)의 미라 주딘 파탄 주지사가 나서 조율하고 있지만 정부와 탈레반 간에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탈레반이 요구하고 있는 '유엔의 신변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탈레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접촉 장소 선정 등 기본적인 것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접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촉장소나 시기 등은 곧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탈레반 측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접촉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의 교신에서 탈레반이 '피랍자-수감포로 맞교환' 요구를 고수할 경우 직접협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간 5일 정상회담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인 피랍사태도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피랍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 탈레반 측은 외신을 통해 전달한 '일부 인질 건강악화설'에 대해서도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인질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의약품과 필수품 전달은 물론 현지 의료진 파견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아프간에 파병된 의료부대인 동의부대 소속 군 의료진을 인질들이 억류돼 있는 가즈니주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4일 한국인 인질 21명이 붙잡혀 있는 카불 남서부 가즈니주의 한 도시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랍자 가족들, 인질 귀환 국제사회 호소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가족들은 4일 '아프가니스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1명의 자식, 형제들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탈레반의 인질살해 행위를 비난하고 억류 중인 나머지 인질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피랍자 가족 16명은 이날 오전 분당타운 피랍가족 모임 사무실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쓴 호소문을 통해 "지금까지 억류돼 있는 21명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민족, 종교, 국가를 초월해 사랑을 실천하러 간 아이들"이라며 "이들이 가족들 품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한국인들은 전쟁의 아픔을 품고 사는 민족이기에 아프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한다"며 "전세계인의 사랑에 빚진 한국인들은 분쟁과 기근, 전쟁 폐허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빚을 갚으러 간 것이지 종교적인 이기심만으로 아프간에 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를 비롯한 세계 20여개국의 주한 대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분당타운 피랍가족 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랍된 봉사단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양대 이슬람 단체도 납치행위는 이슬람의 율법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인 인질 21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아프리카 연합(AU)도 이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AU 본부에서 성명을 내고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게까지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탈레반의) 행동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저들은 죽이겠다고 협박…죽고 싶지 않아요"

탈레반 잇단 '女인질 육성' 공개…심리전 수위 강화

탈레반이 피랍 사건 9일만인 지난 달 26일 처음으로 미 CBS방송을 통해 임현주씨의 육성을 내보낸 데 이어 4일에는 AFP통신을 통해 또 다른 한 여성 인질의 '구명' 호소 내용을 공개했다.

탈레반은 앞서 지난 달 28일과 30일에도 국내외 언론을 통해 각각 유정화씨(39)와 이지영씨(36)의 절박한 모습의 육성을 공개한 바 있다.

탈레반측의 네번째 '통화 주선' 주인공으로 이날 AFP통신 기자와 통화한 '싱 조-힌(Sing Jo-hin)'이라는 이 여성은 "저들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라며 울먹이며 한국과 아프간 정부는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까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측이 이처럼 연약한 여성 인질들만을 골라 수 일 간격으로 네 차례 언론들과 통화를 주선한 것과 관련, 수 일째 교착상태를 보여온 인질협상을 가속화시키고, 섣불리 구출작전에 나서지 못하도록 심리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AFP통신과 통화한 이 여성이 '죽고 싶지 않다'며 극도로 불안한 심경을 밝힌 것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는 김선일씨의 '최후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면서 한국과 아프간 등에 압박을 가하려는 탈레반측의 의도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또 이 여성이 '전쟁'(구출 작전)이 개시되면 진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군사작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인질협상이 수일 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아프간 정상회담과 한국측과의 대면협상을 앞두고 관련 국가들에 심리적인 압박을 한층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싱 조-힌'으로 밝힌 이 여성의 신원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것도 미스터리중 하나. 이 이름은 샘물교회측에서 밝힌 20명이나 아프간에서 합류한 3인의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비슷하게 추정해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바이=연합뉴스

연합군-탈레반 무력충돌 격화…공습으로 100여명 숨져

한국인 인질 석방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과 탈레반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지난 2일 아프간 남부 헬만드 주(州)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탈레반 무장세력 1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습으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불분명하지만 "100명이 넘는 탈레반 요원들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습 당시) 민간인이 있었다 해도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헬만드주 주도인 라슈카르 가와 인근 도시 칸다하르의 병원에는 40여명의 민간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불·페샤와르·알제AFP·AP·로이터=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F1대회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치경

정치부 차장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 억류사태 추이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던 지난 달 31일.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 드넓은 간척지에 펼쳐진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공사 부지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F1 경주장 부지 현장에서 '안전공사 기원제'가 열려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F1대회 추진에 대한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안팎에 보여주었다.

F1대회 운영업체와 전남도 관계자 등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의 의식을 '눈물의 착공식'이라고 부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F1대회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데다 지역 일부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하마터면 7월 착공이 물 건너갈 뻔 했던 일을 되새기며 회포를 나누기도 했다. 7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면 경주장 건설 공기에 쫓겨 2010년 첫 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강박감에 짓눌려왔던 얼굴들이 조금씩은 밝아져 보였다.

그러나 F1의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니다. F1대회 개최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제정없이 경주장 착공으로 일단 스타트한 F1대회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울퉁불퉁한 길에 빠질 수도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한 차례 물건너간 적이 있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일이다. 7월의 마지막 날 공사 시작을 알리는 안전기원제를 부랴부랴 지낸 것은 전남도가 대회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압박용 이벤트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사 성공을 보증할 특별법 재수(再修)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관건은 F1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수익성 증대로 모아지고 있다. 1차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론은 민간기업이 대회 유치권을 따오고, 사업 전반을 운영해 수익도 챙겨갈 행사에 정부지원이 타당하느냐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최초 특별법 제정 실패의 원인진단이 나와 있는 만큼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F1대회의 지역발전 기여향상 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이 전남도의 우선 과제다. 또다시 투명성 문제가 불거져 끌려다니다보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맞을 수도 있다.

F1대회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겨 지역을 살찌울 수 있을 지에 대한 사업성도 다시 분석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주장 공사 시작은 알렸지만 크고 작은 산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달려야 할 F1대회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다.

/unipark@kwangju.co.kr